



3면

"민의 거스르는 정권 있을 수 없다"

전주매일

www.jjmaeil.com

2024년 11월 14일 목요일 (음 10월 14일) 제3624호

대표전화 (063)288-9700

비수술적 척추관절 통증치료 전문
세인 신경외과 의원
원장 박경문 ☎ (063)220-6600
전주시 완산구 효자 천변 2길 6번지



제2중앙경찰학교에 대한 남원시 유치를 위한 대토론회가 13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가운데, 참석자들이 국회의사당 앞에서 '국토균형발전의 핵심, 제2중앙경찰학교 남원으로!' 라는 현수막을 내걸고 퍼포먼스를 하고 있다.

“경찰 인재양성 최적지 남원” 공감대

‘제2중앙경찰학교 남원 유치’ 국회 대토론회

전북 국회의원 포함 여야 의원 대거 참석해 지지 표명

토론회서 필요성·역할 강조... 역량 강화 방안도 제안

900여명 전북자치도민들, 국회의사당 앞에서 결의 다짐

전북자치도, 치안 교육 격차 해소·지역균형발전 도모

경찰 인재 양성 거점인 제2중앙경찰학교에 대한 남원시 유치를 위한 대토론회가 13일 국회의원회관에서 개최됐다.

더불어민주당 전북도당(위원장 이원택), 국민의힘 전북도당(위원장 조배숙)이 주최하고 전북특별자치도, 남원시가 공동으로 주최한 이번 토론회에는 전북 지역 국회의원을 포함해 여야 의원들이 대거 참석해 남원의 입지 조건을 지지하는 목소리를 높였다.

제2 중앙경찰학교 설립은 급변하는 치안환경에 대응할 전문 인재 양성을 목표로 하며, 특히 전북 남원은 지리적 접근성과 국유지 활용 가능성 등에서 최적의 입지로 평가받고 있다. 남원시는 영호남을 잇는 교통 중심지로 고속도로와 KTX 등 교통 인프라가 잘 갖춰져 있어 전국 각지에서 접근이 용이하다는 장점이 있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자치경찰발전연구회 장일식 부원장의 발제로 제2중앙경찰학교의 필요성과 역할이 강조됐다.

이어 패널 토론에서는 서울과학기술대 강기홍 교수와 경남대 김창은 교수 등이 참여해 경찰 인재 양성의 중요성과 교육 시스템의 필요성에 대해 논의했다. 또한 전북경찰지장협의회 한정민 정책국장은 평생학습체계 구축을 통한 경찰 역량 강화 방안을 제안했다.

토론회 참석자들은 남원 유치의 필요성에 공감하며, 경찰청 및 관계부처에 유치 의견을 적극 전달할 것을 약속했다. 특히, 900여 명의 전북도민이 국회의사당 앞에서 남원 유치를 위한 결의를 다짐하는 퍼포먼스를 펼치며 사회적 관심을 높였다.

전북특별자치도는 제2중앙경찰학교 남원 유치를 통해 치안 교육의 지역 격차 해소와 함께 지역균형발전을 도모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경찰청과 정치권에 남원의 경제성과 지리적 이점을 지속적으로 알리며 정책 결정 과정에서 남원의 강점을 부각할 예정이다.

이원택 더불어민주당 전북도당 위원장은 “남원에 제2중앙경찰학교를 유치하는데 국민의힘 전북도당위원장께서도 많은 힘을 내고 있다”며 “국가균형발전 상징, 경제성 제일 좋은 곳, 영호남이 함께 하는 곳, 여야가 함께 하는

곳이 남원이다. 남원이 다시 한번 도약하고 발전하는 계기를 만들겠다”고 말했다.

조배숙 국민의힘 전북도당 위원장은 “남원이 너무나 입지가 조건이 좋다. 지역경기 활성화와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는 좋은 대안이라 생각한다”면서 “여야가 서로 한 마음이기 때문에 잘 될 것이라 생각한다. 지지도 힘을 다 해서 돕겠다”고 말했다.

국민의 힘 동행의원인 김대식 의원(부산 사상구)은 “제2중앙경찰학교 유치는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문제다. 달빛고속도로처럼 정말 중요한 사업이라 생각한다”며, “남원이 힘내서 좋은 소식 있었으면 바라고 힘을 보태겠다”고 말했다.

박희승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어제 19년만에 여야 협치로 간호법이 통과됐는데, 제2중앙경찰학교 문제도 여야 협치로 이를 부분”이라고 생각한다면

“우리 지역에 대한 절박함, 염원이 있기 때문에 여기 오셨고, 우리 시민들의 염원도 여기서 잘 보여줬던 만큼 3배수에 든 남원에 유치될 것으로 보고, 앞으로도 열심히 뛰겠다.”고 의지를 피력했다.

이연주 전북특별자치도 자치경찰위원장은 “제2 중앙경찰학교가 남원에 설립된다면 수도권 이남 지역의 치안 인프라 격차를 해소하고 남원이 균형발전의 핵심 거점으로 자리 잡게 될 것”이라며, “이번 토론회를 통해 남원 유치를 위한 다양한 방안이 발굴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최경식 남원시장은 “제2중앙경찰학교가 남원에 설립된다면 이는 경찰 인재 양성뿐 아니라 국토 균형 발전의 중요한 상징이 될 것”이라며 “남원시는 이번 대토론회를 계기로 앞으로도 영호남과 협심해 경찰 인재 양성의 중심지 제2중앙경찰학교 남원유치 성사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의지를 밝혔다.

한편, 이날 토론회에는 국민의힘 권영진·김대식·조배숙·송석준·박수민·김상욱·최은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한병도·이춘석·안호영·신영대·이상식·허성무·김문덕·이원택·이성운·박희승 의원, 조국혁신당 강경숙 의원이 참석했으며, 이학영 국회 부의장과 애향운동본부 윤석정 총재도 함께 자리했다.

이만호 기자·남원=김기주 기자

재가복지서비스 개편안 일방적 추진 “문제 있다”

국주영은 도의원, 도 복지여성보건국 행감서 제기
“도, 재가노인복지시설·노인맞춤돌봄 통합운영안 관계기관에 일방 통보... 서비스 이용자 불안 가중”

전북특별자치도의회 국주영은 의원은 13일 진행된 복지여성보건국 소관 행정사무감사에서 전북특별자치도의 일방적인 재가노인복지시설 개편안에 대한 문제를 제기했다.



요한 거동불편 노인들에게 서비스를 제공해오던 노인복지법에 의한 복지시설로 장기요양등급을 받지 못했지만 관련 서비스가 필요한 취약계층에게 돌봄서비스를 제공해 온 시설로 돌봄노인에 대한 재가복지 서비스를 제공해 왔다.

이에 따르면, 인구고령화에 따라 노인 돌봄과 관련한 문제는 지속적으로 증가할 예정이고, 이에 따른 관련 시설의 역할 또한 더욱 중요해지고 있는 상황에서 최근 전북특별자치도가 복지 사각지대 어르신들에게 전문적인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재가노인복지시설에 대한 일방적인 개편방안을 통보함에 따라 도내 관련 시설과 서비스를 이용하고 있는 어르신들의 불안을 가중시키고 있다.

그러던 중 지난 2020년 맞춤형돌봄서비스가 시작되며 30여개 수행기관이 노인맞춤돌봄서비스를 지원하고 있지만, 여전히 20여개소는 노인돌봄종합서비스만을 제공하고 있고, 지역사회 내에서 노인돌봄의 역할을 충실히 이행하고 있다.

이후, 복지부가 맞춤형돌봄서비스를 시작할 당시 재가노인지원서비스와 노인맞춤돌봄서비스는 중복 성격이 아닌 상호 보완적임을 강조하였고, 지역 내 다양한 돌봄 수요 대응을 위해 관련 예산 편성에 협조를 요청하고 있다.

또한, 복지부가 맞춤형돌봄서비스를 시작할 당시 재가노인지원서비스와 노인맞춤돌봄서비스는 중복 성격이 아닌 상호 보완적임을 강조하였고, 지역 내 다양한 돌봄 수요 대응을 위해 관련 예산 편성에 협조를 요청하고 있다.

지난 9월 말 전북자치도 고령친화정책과는 재가노인복지시설 운영과 관련해 ‘2025년 재가노인복지시설 지원계획 송부 및 25년 예산수요 조사’이라는 제목의 공문을 보내 재가노인복지시설 및 노인맞춤돌봄 통합 운영에 대한 의견 및 예산 수요에 대한 의견을 묻는 공문을 각 시·군으로 발송했다.

이러한 상황을 모두 인지하고 있음에도 전북자치도는 해당 시설들에게 내린 개편 방향이라며 일방적인 통보와 같은 공문을 발송했고, 재가노인복지시설들의 경우 관련 개편안이 시행될 경우 현재 서비스 이용하고 있는 많은 어르신들은 서비스 제공에서 소외되며 또 다른 복지 사각지대 발생을 우려하고 있는 상황이다.

관련 개편안의 주요 내용은 현재 운영되고 있는 노인맞춤돌봄서비스를 수행하고 있는 재가노인복지시설에 대해서는 예산을 지속적으로 지원하나, 노인맞춤돌봄서비스를 수행하지 않는 기관에 대해서는 내년도까지 예산을 한시적으로 지원하지 않고 그 이후에는 예산을 지원하지 않겠다는 일방적인 통보였다.

이러한 일련의 상황들에 대해 국주영은 의원은 “관련 정책이 변경될 경우 해당 정책에 대한 모든 이해당사자들과의 충분한 의견 공유와 이해가 기반이 되어야 하지만 이번 도청이 통보한 개편안은 관계 기관, 서비스 이용자 누구와도 협의 과정이 없었다”고 지적하며, “이번과 같은 예산 지원을 불모로 한 행정폭력파도 같은 행위가 다시는 재발하지 않도록 철저히 살펴야 할 것”이라고 질타했다.

재가노인복지시설은 2008년 장기요양법 시행 이전부터 돌봄이 필

/이만호 기자

한빛원전 1·2호기 수명 연장을 즉각 철회하라

부안군의회는 지난 6월 21일 군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한빛원전 1·2호기 수명 연장 반대 촉구 건의안을 채택하였다. 이번 건의안은 부안군민을 포함하여 지역주민의 안전과 환경보호를 위해 과거 핵폐기장 반대운동을 주도적으로 했던 「생명·평화의 부안사람들」로부터 감사의 응원을 받았다.

부안군의회

좋은 사람들이 재밌게 사는 부안을 만들겠습니다